

일본 총리대신, 경제산업대신,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서한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갑작스러운 편지를 드리는 결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입니다.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를 이유로 일방적인 청산을 강행하면서
별인 해고와 노동탄압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
토덴코가 책임을 지고 고용승계를 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한일 양국은 UN과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ILO 협약 체결국으로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ILO(국제노동기구) 다
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3자 선언(ILO MNE Declaration), 이
세 가지 국제규범에 공통되는 점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며, 권리 주체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구제 또는 피해 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사업을 하는 동안 직접 일으킨 부정적 영향,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외주처와 관련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원청
기업이 피해 회복 등의 구제 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구제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에 맞는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도 2022년 9월 기업 활동이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되도록 ‘책임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니토덴코가 인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바로 잡고,
발생한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
청합니다.

<요청사항>

1.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일본 정부의 <책임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 니토덴코는 국제규범이 정한 “노조할 권리(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및 “일할 권리” 를 침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가 한국오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와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3.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와 한국오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하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정부가 국제 규범의 준수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요청은 특정 민간 기업의 고용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이자 외교적 노력입니다.

이만 줄이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경제산업대신, 외무대신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